

김동연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위해 ‘결합 산단’ 도입하겠다”

3차 본회의서 경기북부 발전방안 제시

남부 산단 개발 이익 북부에 재투자
공공임대산단… 영세기업 부담 완화
지역별 주민의견 청취 발전계획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북부는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열악하다”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결합 산단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미 한 곳에 시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재 평택 산단의 개발이익 120억 원을 파주 산단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 1차로 승인이 나서 착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차 계획으로는 안산 산단에서 나는 개발이익을 포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부

산단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북부에 투자함으로써 북부에서 B/C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북부의 공공임대산단을 조성하는데,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작은 규모의 공장 부지를 원하고 있다”며 “공장부지를 쪼개서 제공하고 동시에 조성원가를 1%로 낮춰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경기북부 문제)가 다 해결되진 못하겠지만 일단 제 계획을 말씀드렸다”며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도내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만나 북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다임지 문제 등 경기북부의 다양한 문제를 도민 의견 수렴해 소프트한 틀에서 해결하겠다”며 “북도 신설을 위한 추진 조직의 확장 문제도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규제의 재설계와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중요한 논리와 철학은 경기북도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맞는 발전 계획 만들어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경기북부 발전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 1~2% 포인트 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며 “타겟 정하지 않고 지역별 발전 계획 제시해 청사진 만들어 주민들 의견 따라 정책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북도 신설 논리 중 하나는 그동안 북도가 70년 동안 중복규제 등 정책에 의해 받은 피해와 고통”이라며 “분단된 현실 속 군사보호, 상수도, 환경보호 등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신 분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아직 미흡하다. 규제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도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홍 기자

“남북관계, 기존 틀 벗어난 새로운 방식 고민해야”

주한 외국 대사관 간담회 개최

도, 풀뿌리 교류·협력 방안 구상 중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해 경기도는 해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교류협력사업 추진 자격을 갖게 되면서 도는 다양한 방식의 풀뿌리 교류협력 방안을 구상 중이다.

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DMZ(비무장지대) 관련 학술·도민포럼 및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작은 통일 공간을 마련한 전시 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와 국내외 남북교류협력 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주한 외국 대사관 간담회’를 열고 남북협력사업 경험 공유와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8년에는 평화부지사 직제 신설과 도 평화협력국을 따로 구축하고, 경기국제평화센터를 국 산하 남북협력 전담 조직으로 만들어 국제 평화교류 사업 기획·추진과 함께 DMZ 국제 행사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긴 거리의 접경 지역이 존재하는 도는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보건·의료·농림·축산·인도적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을 비롯해 통일 교육과 탈북민 지원, 관련 행사 등을 매년 지원해왔다.



지난 16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DMZ 포럼 개회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Let's DMZ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DMZ에서 얻는 ‘더 큰 평화’의 영감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대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며 이 같은 교류 사업들이 활발했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유엔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봉쇄 등으로 남북교류의 끈은 결국 다시 끊어졌다.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도는 올해도 도내 인식개선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며 교류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준영 도 평화협력국장은 “교류 협력 주체인 북한과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류 재개를 앞두고 우선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토론회나

문화 행사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젊은 세대로 아우를 수 있도록 중심으로 MZ세대, 기성세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는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동완 동아대 부산하나센터장은 “기존의 통일교육을 고수하기보다는 가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중 국경 등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제공 등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단체들과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지난해 ‘학생 마약류 사범’ 2018년 대비 2배↑

강득구 “교육부 차원 대책 필요”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기준 3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부 지침으로 시행되는 마약 관련 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마약류 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 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 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늘어 약 147% 이상 폭증했다. 나이가 지난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 사범은 255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매년 1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그중 상당수는 교육청 소속으로, 지난해 기준 공무원 마약류 사범 11명 중 36%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 사범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은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시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 10

시간·3개월에 1회 이상 관련 교육 시행을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마약 교육 한정이 아닌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돼 실제 관련 교육 시간은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마약류 사범 수가 2018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지점”이라며 “이를 관리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 마약류 사범 숫자가 상당한 것 역시 충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교육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별 기자

“경제 위기 속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 일할 것”

의정보고서

이상원 경기도의원



11대 도의회 전반기 안행위에 배정

도민 안전위한 조례제정 최우선 목표

현실적 정책위해 생각·시선 전환 필요

“제가 직접 겪어 봤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불편한 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죠.”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여기 누구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있다. 이상원(고양7·사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해 2번의 실패를 겪었다. 정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자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적지 않았다.

이런 불편함이 그를 정치권으로 이끌었다.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를 토대로 도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현실적이지만 않은 지원 정책이 많다.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생각과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더 현실적인 방안들로 사업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다”라며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동기부여만 떨어뜨릴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대 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배정 받았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만큼 도민이 최대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이 의원은 “전염병이 광장히 유행하고 있다. 그런 위험 요소들로부터 도민이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또 사고 현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고통 받는 대원들도 많다”며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발전에 대한 고민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현안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꼽았다. 저출산 시대에 교내 학생수가 떨어진다든 이유로 학교를 줄이려는 정부와 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부딪히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는 “과밀학급은 건드리기 애매한 부분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있고 또 한 지역구가 아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빈 학교가 많다”며 “이런 배분에 문제가 좀 있는데 주민들은 학교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의 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제 위기 상황 속에 공정성마저 어긋나면 도민의 삶이 더 힘들어진 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치권에 나왔다. 결혼 자금까지 털어 나왔으니 제대로 각오하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수빈 기자

김민철 “아이들과 주민들 건강·안전이 우선”

송양유치원 옆 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관련 학부모·현안 의견 청취

김민철(민주·의정부 을)의원은 송양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옆 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송산3동 송양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으로 송양유치원을 찾아 지식산업센터 건설 추진 시 발생하게 될 여러 의견을 청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당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지난 2019년 송양유치원 인근 건립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중 돌연 중단됐으나 올해 들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단과 재개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주민·기관을 대상으로한 공청회 없이 사업이 재개된 사실이 밝혀져 송양유치원 학부모와 송산3동 주민들에게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유아 건강 및 학습권 침해 ▲공사 차량에 의한 유해 물질을 통한 유아 건강 위험 ▲통학로 혼잡 및 사고 발생 가능성 ▲유치원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 반대 의견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송산3동에 추진되는 지식산업센터는 물류를 이동시키는 5t 이하 트럭 통행량이 늘게 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송양유치원 아이들 및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1일 김민철의원(왼쪽에서 첫번째)은 송산3동 송양유치원을 찾아 지식산업센터 건설 추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송산3동은 이미 교육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 주거 형태가 완성돼 있어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건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양유치원 학부모 비대위와 의정부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적극 협력하고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김한별 기자

당신의 건강!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약문의 : 031-250-5800
www.gg.kahp.or.kr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조원동 779) | 수원종합운동장 옆